법무부, 2번째 검찰 고위 인사 단행

11일자 인사로 고검장 2명 · 검사장 6명 승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형사 · 공판부 우대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옮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을 두고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각을 세웠던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오는 11일 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지검장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좌에 남는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1월13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임해 '검·언유착'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검장 승진자는 2명으로, 모두 사법연수원 24기다.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장영수(53·24기) 서울서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검사장 승진자는 27기에서 3명, 28기에서 3명 등 총 6명이다.

신성식(55·27기)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종근(51·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정현(52·27기)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고경순(48·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대검 공판송부부장으로, 이철희(50·27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김지용(52·28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성윤 체제' 중앙지검 1·3차장검사가 검사장 승진에 성공한 셈이다. 이정현 차장검사는 '검·언유착' 수사를 이끌었고, 신성식 차장검사는 '삼성 합병 의혹' 수사의 키를 잡았던 인물이다.

추 장관이 예고한 대로 형사·공판부 출신을 우대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종근 차장검사와 이철희 지청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편, 고경순 차장검사는 여성검사로는 역대 네 번째로 검사장 승진에 성공했다.

검사장급 공석은 모두 11곳이었으나, 6곳만 충원이 이뤄졌다. 대전고검 차장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부산고검 차장검사·광주고검 차장검사·대검 인권부장 등 5곳이 공석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장 직급 축소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수사권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로 대검 인권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상철(51·23기) 수원고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박성진(57·24기) 광주고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구본선(52·23기) 대검차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오인서(54·23기) 대구고검장이 수원고검장으로 전보됐다. 조상철 고검장은 '검·언유착' 수사에서 빚어진 검사간 몸싸움 사태 감찰을 이끌게 됐다.

심재철(51·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는다. 문찬석(59·24기)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맡게됐다.

서울 소재 검찰청 수장도 변동이 있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 자리에 김관정(56·26기) 대검 형사부장이 보임한다. 서울남부지검장은 박순철(56·24기) 의정부지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은 노정연(53·25기) 전주지검장이 맡는다.

아울러 이주형(53·25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고흥(50·24기) 울산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문홍성(52·26기) 창원지검장은 수원지검장으로, 노정환(53·26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청주지검장으로, 조재연(57·25기) 수원지검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이수권(52·26기) 대검 인권부장은 울산지검장으로, 최경규(57·25기) 청주지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여환섭(52·24기) 대구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배용원(52·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뉴시스

"전북은 청소년기 보낸 제2 고향
文 정부 성공 · 전북발전 디딤돌"

'민주 최고위원 도전'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 입후보한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이 지난 7일 전북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보개혁을 담당할 민주당 왼쪽 미드필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최고위원에 나선 신 의원이 이날 전북도의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이 잘 돼야 민주당이 잘 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전북발전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매년 1만여명에 달하는 전북의 청년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전북형 디지털·그린 뉴딜사업,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북발전 사업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하동이 고향인 신 의원은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전북은 초·중·고 청소년기를 보낸 제2의 고향"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전북에 더 많은 기관이 이전하도록 적극 역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신 의원은 전주 팔복초등학교와 완산중학교, 전북기계공고를 졸업했다.

/유호상 기자

"사전에 범죄 예방할 것" | 진교훈 신임 전북청장 취임

진교훈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7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향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면서도 "경찰의 책무는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후 대응보다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며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사전에 제거하고, 앞장서서 해결하는 '3선 치안'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선 치안과 함께 경찰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 지역사회 공동체가 참여하는 융합 치안도 펼칠 계획"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경찰관들이 소신과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이 지난 7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주 출신인 신임 진 청장은 1989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한 뒤 2010년 총경, 2016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정보·기획수사 전문가로 꼽히는 그는 2010년 정읍경찰서장 이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관실 새경찰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 /뉴시스

배용원 신임 전주지검장 임명

제68대 전주지방검찰청으로 배용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배 신임 전주지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 37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8년 창원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거창지청장과 법무부 법무심의관, 대검찰청 공안3과장 등을 역임했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익산 을)을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북출신 최고위원 필요"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한병도 후보 지지 선언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 을)을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성경찬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여명은 지난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전북 출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지지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무수석으로 일한 한병도 후보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청와대와 전북도, 민주당과 전북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전북도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민주당 도의원들은 "한병도 후보가 주민참여권 보장, 지방의회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병도 후보는 지방자치법을 다루는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법안 통과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경찬 원내대표 등은 "전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의견을 모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이에 따른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한병도 후보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적극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성경찬 원내대표는 "도의회 민주당 소속 36명 의원 대부분이 한병도 후보의 지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건강 · 안전 위협받아서는 안돼"

전북대학교병원 방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전공의 집단 휴업 대비
비상진료대책 간담회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공의 집단휴업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응급의료기관 직원 격려를 위한 현장 방문'을 위해 지난 7일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7일 오후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의 이번 전북대병원 방문은 전공의 집단휴업과 관련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오후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김강립 차관은 전공의 집단 휴업에 대비한 병원 측의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설명 및 간담회를 가진 뒤 응급실 진료구역과 격리병상, 응급실중환자실 등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강립 차관은 "긴 장마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등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남천 병원장을 비롯한 전북대병원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제한 뒤 "이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분야까지를 포함한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루어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병원에서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되며 아프고 약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극단적인 방식 대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앞으로 현장과 전문가 및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소통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남천 병원장은 "이번 전공의 집단휴업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로서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고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과별로 전문의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해 최선의 노력을 하다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지혜와 슬기를 한 곳으로 모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집단휴업에 대비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진료과별 전문의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을 포함한 필수 유지업무의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별 전문의 위주의 주간 및 야간 당직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내년부터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법무부, 수사권 조정안 입법예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중요범죄의 경우에도 ▲주요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뇌물범죄 3000만원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사기·횡령·배임 범죄 5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5000만원 이상 등으로 추가 제한을 뒀다.

법무부는 지난해 사건 기준으로 볼 때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5만여건에서 8000건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검·경 협력관계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사법통제 제도의 구체적 절차도 다뤘다.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개정 법령의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다만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뉴시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민주 이원택 의원,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7일 농어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축사용지 양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해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조세특례를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내외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농수산 식품의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농어가의 경제적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유호상 기자